

한시가 급한데…전남대 반도체연구소 ‘지지부진’

강경숙 의원 “설계 공모 2회 유찰·부지 변경 일정 차질”
이근배 총장 “내년 3월 착공…한국어 강사 처우 개선도”

국감 연장

자연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공동 연구소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연구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방 거점국립대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전남대를 비롯해 부산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강원대 등 6개 대학이 대상이며, 시설과 기자재 구축 등에 총 2665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현재 착공에 들어간 대학은 강원대 한 곳뿐이다. 전남대는 설계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메다 건립 부지까지 변경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 의원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시설과 장비를 제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부지 선정과 입찰 과정에서 약 7개월의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설계를 마치고 지난달 교육부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의 인력 양성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산시설 구축 시기와 전문인력 양성 시기가 어긋날 경우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대학의 연구·실습 기반도 갖춰져야 하지만 연구소 건립이 늦어지면서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이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실습 기반도 갖춰져야 하지만 연구소 건립이 늦어지면서 교육과 산업 현장의 연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장은 “지역 대학들과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비전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립대 소속 한국어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민정 교육위 간사는 한국어 강사들이 10주 단위 계약과 2주 휴식을 반복하는 초단시간 근로계약 구조를 지적했다.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제 강의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 자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전남대는 현재 한국어 강사 28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간강사 대우가 가능해진다면

4대 보편을 추가하고 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학교재정법상 시간강사 임금을 대학 회계나 수익으로 대체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학 총장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지역별 차등화 정책 절실”

국회미래연구원 “평균 연소득 시군구별 2.18배 차”
전남 14개군 일자리 진입·취업 후 보상 모두 낮아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일자리 정책보다는 지역별 차등화된 일자리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전국 시군구별로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이 최대 2.18배 차가 나는 현실을 고려해 ‘일자리 진입 기회’와 ‘보상수준’·‘안정성’을 함께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남 서남부와 북부는 청년이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하더라도 받는 소득이 낮은 지역인 반면 동부권과 영광군은 일자리 진입과 취업 이후의 보상이 모두 높은 지역이어서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1일 발간한 브리프 ‘청년 고용의 지역격차 진단 및 정책 제안’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024년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활용해 22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의 고용 현황을 분석을 토대로 “지역의 일

자리 여건이 청년의 유입과 정착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25~29세 청년의 약 77%가 직업을 이유로 이동했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노동시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달라지는 시군구별 고용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전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 근로소득은 3578만원이다. 서울 서초구가 5329만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화천군이 2442만원으로 가장 낮아 최고 지역의 소득이 최저 지역의 2.18배에 달했다.

브리프는 “시군구 간 임금근로자 비율 차이의 78%가 같은 시도 안에서 발생하고 시도 간 차이는 22%를 차지한다”며 “광역 단위 평균보다 시군구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근로 비율과 근로소득

의 시군구 중위값인 68.1%, 3112만원을 기준으로 지역을 네 유형으로 구분해 대책 방안을 내놓았다.

임금근로 비율과 근로소득이 낮은 ‘저진입·저보상형’은 80곳에 달해 전체 시군구의 34.9%를 차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개 시군구 가운데 모두 14곳이다. 옛 전남 서남부와 북부 군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청년 인구 비중이 낮고 임금일자리 진입과 보상수준도 낮아 청년 유출과 취약한 고용 여건이 함께 누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브리프는 해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과 채용의 연계, 인접 지역 취업 연계와 통근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금근로 비율은 높지만 근로소득은 낮은 ‘고진입·저보상형’은 전국 34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14.8%였다.

광주특별시는 북구와 서구, 장성군과 화순군이 이 유형에 속했다. 이들 지역은 취업 이후의 보상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임금근로 비율은 낮지만 근로소득이 높은 ‘저진입·고보상형’도 전국

34곳에 달한다.

광주특별시는 나주시와 무안군, 동구가 이 유형이다. 임금일자리엔 진입하는 청년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다.

임금근로 비율과 근로소득이 모두 높은 ‘고진입·고보상형’은 전국 81곳이다. 광주특별시는 광양시와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을 비롯해 남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청년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여건이 함께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주지만 유형 내부의 성별·직종별 격차는 별도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양시와 여수시는 청년 근로소득의 성별 격차가 큰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여성의 채용과 직무를 확대하고 돌봄·유연근로 지원을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봉섭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고용성과를 정기적으로 추적해 여건이 악화되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수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산림조합 특화사업 ‘5곳 중 1곳’ 만성 적자”

이개호 의원 지적…국고 풀긴 뒤 3년간 대책 ‘0건’

국민 세금과 조합 자금 855억원이 투입된 산림조합 ‘임업경영력 강화 특화사업’이 만성 적자에 빠졌는데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사후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0일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앙회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회생·구조조정 대책을 즉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64개 조합에 투입된 특화사업비는 총 855억9500만원이다.

재원별로는 국고 347억4200만원(41%), 지방비 128억원(15%), 조합 자본 380억5300만원(44%)이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56%가 공공재원이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있는 62개 조합 가



운데 12곳(19.4%)이 3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만성 적자’ 조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평(갯가공공정)·합천(표고재배사)·제주(산림휴양타운) 등 3곳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 연속 적자를 냈다. 누적 적자 규모는 포천(임산물 복합유통센터)이 4년간 13억67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가평이 6년간 8억7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1명의 연간 최저임금(약 258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울진조합은 2024년부터 3년째 연 이익이 약 100만원에 머물렀다.

이개호 의원은 “855억원을 쏟아붓고도 역대 적자 조합을 방치하다 국고까지 끊겼는데, 3년 내내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다시 받아오겠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이자 임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처우개선해야”

송영길 의원, 소방공무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사진)은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며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이 주관한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견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인과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송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무



엇이 달라졌느냐”며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은 총 8조59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89.3%에 달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불과 8.4%다. 소방공무원 100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8명만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92명분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셈이다.

송 의원은 “사과만으로 끝나는 안 된다. 그 발언의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목포신항 배후단지 입주 ‘0’…“기업·화물 유치전략 마련을”

강성찬 특별시의원, 목포항 물동량 10년 이상 정체 지적
인센티브 중단 재발 방지 촉구…시 “재원 분담 재검토”

국비 452억원을 들여 조성한 목포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기업이 한 곳도 없어 기업 유치와 물동량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포항 물동량이 10년 이상 정체된 상황에서 신규 항로와 화주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업마저 재원 부족으로 중단돼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기됐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사진)에 따르면 목포항 물동량은 2013년 2000만t을 넘어선 뒤 10년 이상 2200만~2500만 수준

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482만t으로 전국 10위에 그쳤으며, 전국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였다.

항만과 연계한 기업 유치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국비 45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목포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물동량도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며 배후산업 육성과 전략화물 발굴, 영커기업 유치를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물류 관련 기업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실제 투자와 입주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대체 유치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목포항이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이유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을 시설관리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화물을 만들며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끌어내는 일은 시가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기업과 선사의 목포항 이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사업의 지속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목포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사업은 2022~2024년 광역·기초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추진했지만, 지난해에는 목포시가 대응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강 의원은 “목포항의 지원사업이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중단된다면 어느 선사와 기업이 목포항을 선택하겠느냐”며 신규 항로와 전략화물이 정착하는 초기에는 특별시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사와 화주가 지원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목포항 배후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항만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 분담 구조를 재검토해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